

##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 2025년 10월 1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함.
  - 기본소득특위는 기본소득 효과성 제고, 재원 확보, 국민 수용성 확대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내년 시작될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임.
  - 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운동 단체 대표자,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 중앙·지방 재정 전문가, 청년 세대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상임 공동위원장이 위촉됨.
-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정주 여건 개선·공동체 회복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기반을 다지는 제도로 평가됨.
  - 특히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은 최근 5년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국 평균(-1.3%)보다 큰 폭(-4.7%p)으로 줄었고,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보다 18%p 높아 위기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 기간을 거쳐 10월 중순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임.
  -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이며,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선정된 군의 주민은 2026~2027년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며, 이는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기본생활보장 지원 성격을 지님.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공동체 복원·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임.

### ■ 시범사업 대상 지역(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

시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郡 한정)
대구(1개)	군위군
인천(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10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5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6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7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0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0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5.09.17),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5.10.02)

## 세계 경제 동향

### ● 중국 제조업 6개월 연속 위축 | 2025-09-30 중국국가통계국; 연합뉴스; 조선비즈

- 2025년 9월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가 전월보다 0.4p 상승한 49.8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구매관리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원자재 공급, 재고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출됨. 기준값 50을 중심으로,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함.
- '25년 4~9월 제조업 PMI가 50 미만을 기록하면서 중국 제조업이 6개월 연속 위축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2019년 이후 최장기 침체
- 세부 항목별로는 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50.8→51.9)하며 최근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함. 그러나 신규 주문 지수는 49.7로 여전히 위축 국면임.
- 대기업 PMI는 51.0으로 확장세를 보였으나 중·소형기업 PMI는 각각 48.4, 48.2로 위축세를 보여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남.
- 한편,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비제조업 PMI는 50.0으로 전월보다 0.3p 하락하였으며, '24년 11월(50.0)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건설업 PMI는 49.3으로 전월 대비 0.2p 상승하며 소폭 개선됨. 서비스업 PMI는 50.1로 전월보다 0.4p 하락하였으나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 제조업은 내수 침체와 미·중 관세 갈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나,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의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여부가 주목됨.

■ 2024~25년 9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



## 국내 경제 동향

### ● 9월 소비자물가 2.1% 상승 | 2025-10-02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 2025년 10월 2일 국가데이터처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하였다고 발표함.
  - 지난 8월(1.7%)보다 0.4%p 상승(주간브리프 Vol. 34)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2.0%, 전월 대비 0.5% 각각 상승
  -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 전월 대비 1.4%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전월 대비 0.9% 각각 하락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 품목별로는 공업제품(2.2%), 서비스(2.2%), 농축수산물(1.9%), 전기·가스·수도(0.3%) 등 모든 부문에서 물가 상승\*이 관찰됨.
  -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 (농축수산물) 채소류 가격 하락(전년 동월 대비 -12.3%)으로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함.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4%, 6.4% 상승하면서,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을 상승시킴.
  - (공업제품)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며, 6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함.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
  - (개인서비스)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하였으며,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
- 한국은행은 9월 물가 반등(8월 1.7%→9월 2.1%)이 통신요금 일시 할인효과 종료 때문이라고 평가함. 향후 물가상승률은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관세정책, 지정학적 불안, 이에 따른 환율·유가 변동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24~202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 FAO, 식량·농업 관련 SDG 지표 진척 현황 평가 보고서 발표 | 2025-09-25 FAO

- FAO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SDG 2(기아 종식), SDG 5(성평등), SDG 6(물 관리), SDG 12(책임 있는 소비·생산), SDG 14(해양), SDG 15(육상생태계) 등 22개 지표의 이행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UN이 채택한 2030년까지의 국제 공동목표임.
- 전체적으로 지표의 약 절반은 목표 달성까지 '중간 거리(moderate distance)'에 머물러 있으며, 25%는 달성에 근접했으나 나머지 25%는 목표에서 '멀거나 매우 먼' 상태로 평가됨.
  - 보고서에서는 각 지표가 목표에 얼마나 가까운지 상대적 거리 개념으로 평가하며, 세부 수치는 지표별로 상이함.
  - 2015년 이후 성과가 악화된 지표가 60% 이상이며, 개선세를 보이는 지표는 30% 수준에 불과함.
  - (악화 지표) 중등도 이상의 식량불안정 인구 비율('15년 21.4%→'24년 28.0%), 식품가격 이상 빈도('15~'19년 평균 16.34%→'23년 51.2%) 등
  - (개선 지표) 수자원 이용 효율성\*('15년 17.5→'22년 21.5 US\$/m<sup>3</sup>), 산림인증제도 관리 면적('15년 398→'22년 444ha) 등
- \*수자원 이용 효율성(Water Use Efficiency)=생산액(Value added(US\$))/사용된 수자원의 양(m<sup>3</sup>)
- (식량안보 현황) 2024년 전 세계 인구의 약 8.2%(6억 3,800만~7억 2,000만 명)가 기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2023년(8.5%)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5년(7.7%)보다 높은 수준임.
  - 전 세계 인구의 약 28.0%(23억 명)가 중등도 이상의 식량불안정 상태에 있으며, 이는 2015년 21.4%(16억 명)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지역별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22.3%), 오세아니아(23.6%)가 가장 높은 기아율을 보였으며, 서아시아·북아프리카 지역은 2015년 이후 기아 인구가 거의 2배로 증가함.
- (새로운 지표 도입) 여성 최소 식단 다양성(MDD-W)이 새롭게 추가됨.
  - 여성 최소 식단 다양성 지표는 여성이 충분히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했는지를 측정하여 영양 불균형 및 식품 불안정 위험을 평가함.
  - 2019~2023년 기준 전 세계 여성의 약 65%가 최소 다양성을 충족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 일부 지역은 50% 미만에 그침.
- ❖ 이번 보고서는 기아와 영양불균형 개선 속도가 여전히 더디며, 성과가 악화된 지표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새로 도입된 여성 최소 식단 다양성(MDD-W) 지표는 단순한 칼로리 확보를 넘어 영양 질적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정책 우선과제로 부각시킴. 국내 역시 농업·식량 지표를 국제 기준과 연계해 관리하고, 영양과 식단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국내 농업·농정 동향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본격 확대 및 지원 강화 | 2025-09-30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저탄소 인증 농가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함.
    - 저탄소 인증제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농산물 65개 품목과 축산물 3개 축종(한우, 돼지, 젓소)을 대상으로 운영 중임.
    - 정부는 2030년까지 인증 농가 3만 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 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농업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을 달성할 계획임.
  - (제도 기반 강화) 인증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확대하고, 신규 품목과 최신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극 발굴·보급할 계획임.
    -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높은 인증 농가에 갭신 절차 간소화, 정부·지자체 사업 우선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하여 참여 유도
  - (유통·소비 활성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확대, 대형 유통업체 및 대규모 사업체 구내식당 활용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를 추진함.
    - 또한, '저탄소 인증 유통 협의회'를 운영하여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단체 간 정보교류, 수요·공급 매칭, 공동 마케팅 지원
  - (사회적 인식 확산) 홍보 캠페인, 체험 프로그램, 박람회·지역축제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할 계획임.
    - 제품 포장재에 탄소 저감 효과를 표시하는 등 시각화 전략 도입,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 저탄소 농장 방문·체험 신설
- \*가치소비는 가격이나 품질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등 소비자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정보를 찾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방식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을 위해 저탄소 유효인증 농가 수(14천호 → 30.0),  
 유통업체 판매량(연 13.6천톤 → 50.0), 소비자 인지도(85% → 95% 이상) 확대 추진

제도 확대기반 마련

**저탄소**  
(LOW CARBON)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인증기관 확대 및 심사 역량 강화,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법률(26)' 제정 시 저탄소 인증제도 근거 신설, R100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27)과 연계 검토
-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기관 확대(17개소 → 도별 1개소), 인증 심사원 및 컨설턴트 대상 전문성 강화
- 우수 농가 갭신절차 간소화 및 포상, 신규 품목·기술 적극 발굴 적용

유통·소비 활성화

**대형수요처 우선 구매 유도 및 고정 거래선 발굴,  
생산·유통·소비 협업 체계 마련**

- 공공급식(학교, 공공기관 등), 대규모 사업체 구내식당 등 우선구매 유도
- \*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적용 범위에 저탄소 농축산물 추가
- 유통매장의 저탄소 농축산물 판매부스 및 할인행사 확대, 저탄소 포인트 제도 개선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대상 및 적립지 추가 등)
-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
- 정보교류, 수요 매칭 기능 강화, 집중 홍보 등 마케팅 공동 기획

사회적 인식 확산

**캠페인 등 홍보 강화, 교육·체험 기회 확대**

- 포장재 탄소 발자국 공보문구 추가 및 박람회 활용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에서 확인하세요